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 31 통권 166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의 통증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 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제공
-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용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정치자금, 정당비, 정치인 후원회, 종교기부금의 세액공제 방법〉

개념 구분		해당금액, 계산방법, 적용근거법(조특법 제76조), 지방세 10% 별도
정치자금 등		거주자의 정치자금법상 정당, 정치인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조특법 제76조)
적용소득자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내국인) + 월급 등 연말정산자(근로소득자) 등 (연금소득은 해당안됨)
근로자	10만원 세액공제	연 10만원까지 $\times 100/110$ (국세) + $10/110$ (지방소득세) = 100% 세액공제
	초과액 세액공제	연 10만원 초과액 $\times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액 $\times 25\%$ 세액공제
	계산사례	3500만원 후원 : 세액공제 10만원 + $2990만 \times 15\% + 500만 \times 25\% = 5,835,000원 \times 1.1 = 642만원$
사업자	10만원 세액공제	사업이익에서 기부한 10만원 $\times 100/110$ (국세) + $10/110$ (지방세) = 100% 세액공제
	초과액은 손금산입	10만원 초과액은 전액 손금산입, 비용인정(최고 한계세율적용으로 세액감소)
	계산사례	3500만원 후원 : 세액공제 10만원 + 소득 1억 내외 한계세율 35% $\times 3490만원(3490만원 \times 35\% = 1231만원 \times 1.1) \div 1354만원$
상기 이외의 비적법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받은 조직이 상속세 · 증여세를 부담함
종교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times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한도 : 총소득의 10% 등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운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0호 / 주간 5호

2024. 1. 31.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정치자금, 정당비, 정치인 후원회, 종교기부금의 세액공제 방법	표지
C E O 에 세 이	미 · 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의 통증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과년도 미지급 퇴직금 일시 계상 - 무상대여 관련 질의 -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 일반 지급 - 단주차의 세무조정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8 9
직장인Survival	몽치면 용감해진다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무법인-240, 2023.03.13) -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서면법규국조-3911, 2023.05.31)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올해부터 법인 車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처리 인정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용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1
세 무 정 보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제공 -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4 30 38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연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의 통증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부동산업자며 TV쇼맨 출신인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2021년 재임)이 시끄럽게 ‘미국제일’을 외치며 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모로 시끄럽게 정치를 엮다보니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 출신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2021~현직)은 아예 한 수 더 나아가 인플레이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중국을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K전기차’도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중국에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크게 둔 ‘K반도체’가 몸살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합친 쌍둥이적자를 오랜 세월 겪고 있는 나라다. 이런 판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떠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건 대중(對中)콤플렉스다. 1인당 PPP(구매력 평가기준)GDP를 보면 중국은 1만7312달러(2020년)를 반영한 국민총소득 GDP는 24조6811억 달러다. 즉 미국의 23조3931억달러보다 1조2880억달러 차이로 중국의 경제력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모로 강하게 미국중심공급망재편 과정에서 한국에 공장건설하러던 대만 반도체기업을 설득과 강요로 미국투자자로 돌리게 되었는데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년 9월6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드 미국상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기업 글로벌웨이퍼의 도리스 수CEO와 한시간 통화로 대미투자결정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세계3위 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 도리스 수CEO는 “한국의 건설비용은 미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러몬드장관은 “그걸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2주후 텍사스주에 50억달러(약6조9195억원)를 들여 신규공장계획을 밝혔다.

또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은 22년 7월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경제판 2+2’로 불리는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열었다. 사실 대만과 한국에 의존을 벗어나 미·일이 공급구조를 갖기 위해서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잦아지면서도 반도체 미국투자자에 대한 어려움을 한·미 정상회담 대화소재도 못되는 원천이유가 아닌가 싶다.

세계1위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생산가동시기를 1년 늦춰 2025년이 될 것임을 TSMC의 CEO 류더인회장이 밝혔다. 대만이나 한국보다 건축비가 3배 이상인 미국에서 인재 확보도 어렵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 동일한 칩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만보다 50% 이상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작년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IA는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반도체기업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모두 회원사로 가입한 곳이다.

2022년에 세계수요의 3분의1인 1800억 달러(약 227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를 사들인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 상의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9일 (금)	1월 22일 (월)	1월 23일 (화)	1월 24일 (수)	1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342.40	1336.50	1334.70	1336.00	1339.10
일	본	엔	(JPY)	906.57	901.91	901.52	900.82	907.34
영	국	파	운 드	(GBP)	1705.85	1697.89	1696.00	1695.85
캐	나	다	달 러	(CAD)	995.29	995.01	990.06	992.83
홍	콩	달	러	(HKD)	171.65	170.94	170.73	170.81
중	국	원	(CNH)	186.06	185.35	185.11	186.00	186.65
유	로	화	(EUR)	1460.26	1456.25	1452.35	1450.63	1457.61
호	주	달	러	(AUD)	882.70	881.96	876.63	879.56
싱	가	폴	달 러	(SGD)	998.70	996.83	994.67	996.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53	283.31	282.39	282.63	283.02

과년도 미지급 퇴직금 일시 계상

Q 당사는 전임직원이 DC로 가입되어 있으며,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2011년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개업 후 몇년간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최근 몇년간 불입액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말 미지급액이 상당함. 또한, 개업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2024년도에 과년도에 미계상한 미지급 퇴직금을 일시 계상할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A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에 납입하는 임원퇴직금 불입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시 계상금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무상대여 관련 질의

Q 당사는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GAAP 사용)

- 당사가 서버를 구입하여 여기에 당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약 6개월간의 무상대여 실시

- 이후 고객사가 최종사용하겠다는 의사결정시, 해당서버의 Ownership을 완전히 넘기는 구조 이 경우, 서버를 구매했을시와 매출확정이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버구입시

비품 / 보통예금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2) 매출시

보통예금/매출

감가상각누계액/비품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위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서버는 비품보다는 상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 Q**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산입(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중 한분이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추가 납부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비 지급

- Q** 당사에서 일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회 출장 시, 50불로 산정하여 개인에게 지급 하려고 합니다. (급여 X)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 A**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주차익 세무조정

- Q** 단주발생으로 단주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과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어떤 거래에 의해 단주가 발생되었는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매매거래에 따른 실제 처분이익이라면 소득 및 익금에 반영되지만, 매매거래가 아닌 평가손익에 해당한다면 소득 및 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로는 주택취득준비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주택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주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는데 각각의 공제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연 4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이 해당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은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

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②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경우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하는 이자율(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100%를 연 5백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시 1천8백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당해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며,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도 주택 분양권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함)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2년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인적공제 가능 여부

구분	가능 여부	해설
2000년 퇴직 후 공무원연금 연 3600만원 수령	○	2001년 이전에 낸 연금은 과세 제외
근로소득 501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 제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뺀 사업소득 150만원	×	사업소득 기준 100만원
이자·배당소득 합계 1900만원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건설 일용직으로 연소득 3000만원	○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많아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인적공제 받을 수 있지만 탈루에 해당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중앙일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경제활력 제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부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민생 안정	자영업자의 고용 ·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미래 대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시 손금산입 허용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월(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월	신생아 출산 가구 뉴:홈 특별공급도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뭉치면 용감해진다

보통 집단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지혜를 결집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안을 검토할 때보다 타당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적인 판단이 훨씬 위험하다. 여럿이 모여 결정하면 혼자 결정할 때와 달리 각자의 책임감이 떨어져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의 방침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지나치게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특히 집단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여럿이 모여 결정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으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은 중대한 안전일 경우 각 구성원에게 미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회의장에 와서 바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

또 미리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정리한 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각 구성원이 혼자 검토했을 때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서로 토론하게 되므로 좀더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용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무법인-240, 2023.03.13

질 의

- 외주제작사가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
공제 여부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241, 2023.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945, 2023.05.30

질 의

-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 2,106백만원 중 1,337백만원은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고 769백만원이 남아 있음

질의

-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을 202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을 적용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51, 2023.01.30

질 의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해당 권리가 조합원입주

권,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질의3) 부담금(청산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양도차익 계산방법)
- (질의4)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으로 보아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입주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서면법규국조-3911, 2023.05.31

질 의

-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기중에 해당 사업연도 미결산 추정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시 지급 받는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회 신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연도 결산일 이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 및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간접투자기구("쟁점펀드")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쟁점펀드는 리츠법인의 미국 세무상 신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쟁점펀드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처리 인정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그 대상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독과약 기반 확충을 위해 여행사업, 앰블런 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독서실운영업은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방산 R&D도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 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기술이 포함됐고, 로봇 분야에는 논·코딩 교시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2024. 1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 '23년 국회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증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기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3. 미래 대비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II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소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
 -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 (수소) ①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②수소환원제철, ③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 * (현행)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 추가
 -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분 야	세부 기술 (신 규)
에너지·환경 (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 별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기술
첨단 소·부·장 (5개)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①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②추가공제 신설
 - * ① (종전) 대 3% / 중견 7% / 중소 10% → (개정) 대 5% / 중견 10% / 중소 15%
 - ②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 중소 15% 공제율 추가 적용
 - 추가공제 세부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 지표* 중 4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 적용
 - * 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 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③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④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 ⑤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 ① 요건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종부령)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①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②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 * ①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24.1.10~'25.12.31 등
-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 양도세 중과제도 >

구 분	세 율(%)	
	'21.6~'22.5	'22.5~'24.5 (한시배제)
1주택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2주택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3주택이상	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 종부세 중과제도 >

구 분	세 율(%)
1주택	0.5~2.7
2주택	
3주택이상	과표12억원 이하 0.5~1.0
	과표12억원 초과 2.0~5.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로 1년 연장
-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
- * (현 행) 관광호텔업
(개정안)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 * (프로판) 20→14원/kg, (부탄) 275→176.4원/kg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증령·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로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적용대상 (조특령)

-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04의33) 개정내용 >

- ◇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여금 채권 잔액의 최대 100%) 특례 신설
 -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대여금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 (대여금등 범위)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

□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 (현행)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
-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법인령)

- *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비과세) (종부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10~25%)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중부세 합산배제(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 (현행) $\text{Max}\{\text{특허권 등 평가금액}, \{\text{양도가액} - (\text{순자산시가} \times 130\%)\}$



(개정안) $\text{Max}\{\text{특허권 등 평가금액}, \{\text{양도가액} - (\text{순자산시가} \times 12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법인령)

- *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농특령)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조령)

-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
-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완화*
- * (현 행)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geq 90\%$
(개정안)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이자까지 포함

□ 러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소득령·법인령)

-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
- * (현 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민생경제 회복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
 - * (현 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 (개정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추가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용자받은 자'를 추가*
 - * (현 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개정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용자받은 자 추가

□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연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한 요건 완화 (소득령)

- *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 * (현행)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1일 5→8만원)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시행사(SH, LH 등)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23.11.30.)에서 발표
- *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법률(소득법§12) 개정내용>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리,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5,000만원으로 상향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조특령)

- * (현행)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3,0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확대*
- *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
(농·임업용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3 미래 대비

1) 출산·양육 지원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소득령·법인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소득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개소령)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300만원 한도)
-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 (현행)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조특령)

-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여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24년부터 매칭률 82 → 100%로 상향) 혜택 부여
- **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
-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

(기준시가 9→12억원) 상향

3)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 (조특령, 상증령)**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 §121의33 등) 개정내용 >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
-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특구 내 ❶부동산·사용권, ❷부동산개발사업, ❸사회기반 시설사업, ❹입주기업의 채권·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
 - * 중소·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현행)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개정안)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 (국기령)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국징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영세채납자 보호 강화

*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185→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250만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령)

*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

□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득령·법인령)

- *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
-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23→'26년)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구 분		'19	'20~'21	'22-23	'24(안)	'25(안)	'26(안)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관세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법률(관세법 §246의2) 개정내용>

- ◇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보상 대상)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 추가
- (보상액) 수리비 또는 손실자의 청구액(구매가격 한도)으로 설정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법인령)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감가상각비 손금 인정('24.1.1. 이후 적용)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축산업·임업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령)

< 법률(법인법§12) 개정내용 >

-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유상감자차익*,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 *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관세령)

-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을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
 -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 여행사업, 앰블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2개 업종(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추가(199→201개 업종)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1개

☐ 내국세(17개)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교육세법 · 인지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관세(4개)

- 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 추진 일정

- ☐ '24.1.23.(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 '24.1.25.(목) ~ 2.14.(수), 입법예고
- ☐ '24.2.27.(화), 국무회의
- ☐ '24.2월말, 공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합니다.
 -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

-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 2. 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손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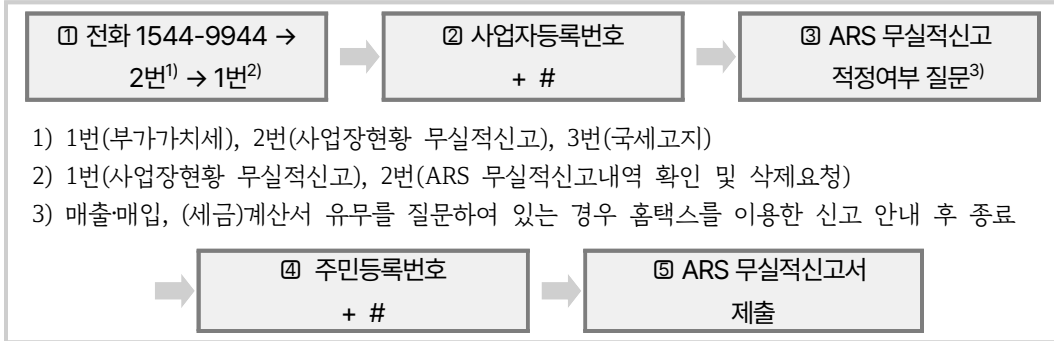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

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 ARS 무실적 신고 방법 /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① 신고도움 서비스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종류		제공내역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3.1 ~ 9월까지의 매출금액
	제로페이 매출 자료*	'23.1 ~ 11월까지의 매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3.1 ~ 11월까지의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3.1 ~ 10월까지의 등기자료
	수출통관 자료	'23.1 ~ 10월까지의 통관자료
매입자료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	'23.1 ~ 10월까지의 용역제공금액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3.1 ~ 11월까지의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1 ~ 11월까지의 수취금액

*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4. 1. 26.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4. 2. 1.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② 미리채움 서비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3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 1.~2. 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3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¹⁾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²⁾와 공제금액³⁾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	1,200만원 (60%)	1,000만원 (50%)
공제금액	400만원	200만원
과세표준 (=)	400만원	800만원
세율 (×)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2.9%)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¹⁾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²⁾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0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했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참고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 관람료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 관람료 사용분 포함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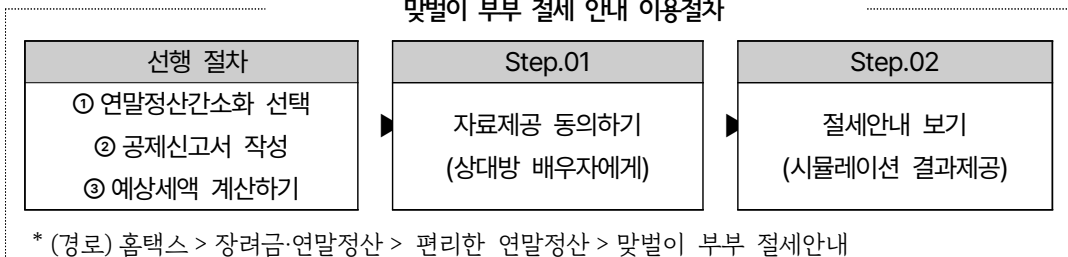
☐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참고 3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 (자료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절세안내 예시

근로자 A는 연봉 1억 2천만원, 배우자 B는 연봉 7천만원으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활용해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128가지 사례를 확인하고 세부담이 가장 낮은 사례 1번으로 연말정산 하였음

* 당초 공제신고서 작성분과 세부담이 동일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표시됨 (사례37)

참고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 주요 서비스

종류		내용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 회사에서 간편제출 요구한 경우 이용 가능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충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입력 필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을 지원
회사	공제신고서 관리	•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 근로자 기초자료·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최대 2천명분의 지급명세서 생성

참고 5

주요 문답자료(FA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 15. 개통하며, 1. 15.~1. 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 1. 7.
	(부득이한 경우)	'24. 1. 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4. 1. 15.~1. 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 15.~1. 17.
	최종 확정자료 제공	'24. 1. 20. 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4. 1. 20. 부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 6~9]

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0~12]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 자료추가 → ② 피교육자 선택 → ③ 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 → ④ '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3.부터 3.11.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초자료

근로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감면 명세,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 1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역동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들은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2~6%p ↑)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6~7%p ↑)

투자세액공제 강화(%)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앞으로 다가올 경기 반등시기를 우리 기업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동경제의 초석을 마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 분야 확대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23년도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분부터 적용(바이오의약품은 '23.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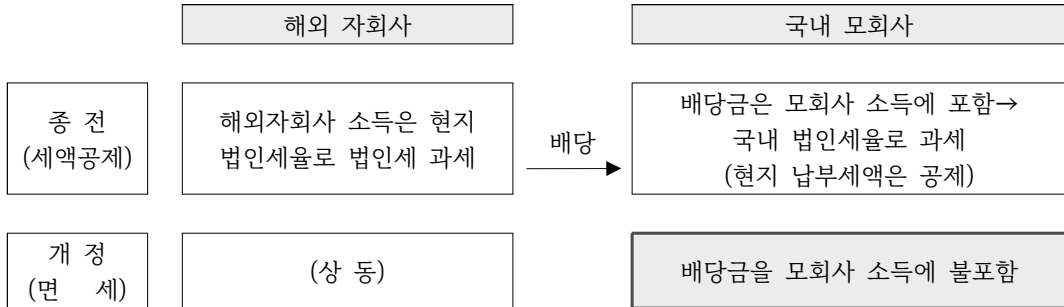
- *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대·중견 30~40, 중소 40~50%)
- (디스플레이) 전자기기·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해 투자 확대 시급
- (수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자립·수입의존경감 등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
- (미래형이동수단) 환경규제 강화, 시장규모 확대 등 미래차 수요 증가 추세로, 생산전환 지원을 위해 생산 시설까지 공제대상 확대
-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가능성, 국제(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 고려
- 연구개발(R&D)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세계(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선도적 지위 유지에 기여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인하

- '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각 과세표준별 1%p 낮은 법인세율* 적용
- *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 10/20/22/25% → 9/19/21/24%
-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과세체계 선진화로 조세경쟁력 순위 상승*
-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조세경쟁력 순위('22.10월→'23.10월) : (종합) 25 → 23 (법인세) 34 → 26
-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및 투자·고용 여력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 및 경기활력 제고 기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 '23년부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종전 외국 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면세 방식으로 전환*
- * 미('18), 일('0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32개국)이 도입(한국 포함시 33개국)



- 그 결과, 올해 해외유보자금의 국내송금이 전년대비 5배 증가하는 등 자본 국내복귀(리쇼어링) 촉진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1~10월, 억불) ('20) 42.9 ('21) 100.8 ('22) 80.2 ('23) 413.5(54조원)

- 유입된 대규모 해외유보자금은 어려운 경상수지(잠정) 여건에 기여*하고, 나아가 실제 기업의 국내투자 재원으로 활용**

* 국내송금 배당규모(413.5억불)는 외환보유고('23.10) 4,128억불의 10%수준에 달함

** “현대차” '23년 59억불(약 8조원) 규모의 해외법인 배당 통해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23.6)